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31호 / 05월 06일

社會科學院, 금년도 경제성장률 8.6% 전망

1. 개요

□ 중국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된 2003년 춘계보고(中國經濟形勢分析與豫測)를 통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8.6%로 전망함.¹⁾

- 금년도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확대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 △고정자산투자 증가, △소비회복,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재정정책의 효과 감소, 세계경제 불안,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흑자 감소 등 제약요인이 존재함.

□ 금년도 경제정책 건의에서는 내수 위주의 성장정책 견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농민 수입 제고와 취업 확대, 사회보장체계 완비, 소득분배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1) 매년 4월중에 발표되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춘계보고'는 국내외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중국경제 분석 및 예측보고서임.

2. 금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

- 사회과학원은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8.6%로 전망하고, 부문별로는 농업이 2.9%, 제조업이 10.7%, 서비스업이 7.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표>금년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

항목		2002년	2003년 예측
GDP	GDP 성장률	8.0%	8.6%
	농업	2.9%	2.9%
	제조업	9.9%	10.7%
	서비스업	7.3%	7.6%
고정자산투자	총투자규모	4조 3,202억 元	5조 370억 元
	명목증가율	16.4%	16.1%
	실질증가율	-	16.6%
	투자율	42.0%	45.0%
물가	소매물가	-1.3%	-0.8%
	소비자물가	-0.8%	0.3%
	생산자물가	-	0.5%
소득증가율	도시주민가처분소득	13.4%	8.6%
	농민 순수입	4.8%	5.0%
소비	소비재 소매총액	4조 910억 元	4조 5,030억 元
	명목증가율	8.8%	10.1%
	실질증가율	9.6%	9.8%
금융	주민저축잔고(증가율)	8조 6,911 억 元(17.8%)	-
	신규여신	13조 1,294억 元	-
대외무역	수입(증가율)	2,952억 달러(21.2%)	-
	수출(증가율)	3,256억 달러(22.3%)	-

- 제조업 중 중공업과 경공업은 각각 11.7%와 9.9% 증가하여 작년보다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성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고정자산투자는 16.6% 증가한 5조 3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투자증가와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된 -0.8%와 0.3%를 시현할 전망이다.

-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은 8.6%, 농민 순수입은 5%, 소비재 소비총액은 10.1%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재정수입과 지출은 각각 16.4%와 14.5% 증가할 것이며, 재정적자는 3,200억 원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수입과 수출은 각각 21%와 15.6% 증가할 전망이며, 무역흑자는 최근 몇 년간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3. 금년도 거시경제 부문별 분석

☐ 금년도 투자는 확대재정정책 지소,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의 증가 등에 힘입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작년도 고정자산투자는 1996년 이래 최고수준인 15.8%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금년 1/4분기 투자도 무려 27.8%나 증가함.
- o 금년도 국채발행 규모는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국채투자의 성장촉진 효과는 여전히 클 것임.
- o 최근 몇년간의 확대재정정책은 민간투자를 유발, 작년도 집체경제와 개체경제의 투자증가율은 2001년보다 현저하게 높은 거의 15%에 달했음.
- o 작년에 12.5% 증가한 외국인투자는 금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임.
- 국내 투자환경 개선은 국내외투자를 촉진시킬 것임.
- o 구체적인 조치로는 투자진입장벽 완화, 공정경쟁원칙의 실현, 소유제상의 제한과 독과점 및 지방보호주의 타파,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금융체계 확립, 중소기업 융자담보체계 완비, 행정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들 수 있음.

☐ 금년도 소비는 도시주민과 농민의 소득증가, 소비구조 개선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은 취업확대, 사회보장제도 정비 등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임.

- 소득수준 제고로 자동차, 주택, 고급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 주민의 소비신뢰지수는 아시아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년에는 통화정책의 역할이 작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함.

- 작년에 M2와 M1증가율은 9.5기간(1996-2000년)의 평균증가율을 3%포인트 상회한 16.8%에 달했는데, 금년의 통화량 증가율은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임.
- 이와 함께 국유상업은행 개혁, 금리시장화,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계 강화 등이 실효를 거두게 되면, 통화정책의 거시조절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거시경제의 안정성장을 보장할 것임.

□ 대외무역의 경우,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대폭적인 수출증가 요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역흑자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금년의 세계경제 및 무역 증가율이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두자리수 증가를 유지할 것임.

□ 그러나 금년도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불안, 국채투자 감소, 완만한 소비증가, 수입 급증 등에 따르는 제약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美 · 이라크간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과 유가 불안 등이 국내 거시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
- 국채투자 감소의 영향, 투자구조 불합리 및 일부 부문의 과잉투자, 가격파동 등이 우려됨.
- 소비확대 측면에서는 취업기회 확대, 주민소득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제고가 시급함.
- 대외무역에서는 관세인하와 무역상대국의 대중국 비관세장벽 강화 등으로 무역흑자가 감소할 전망이고, 인민폐 평가절상 압력도 존재함.

4. 정책 건의

□ 사회과학원 춘계보고는 금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극복, 내수확대, 안정적 경제성장, 경제정책의 연속성 등을 위해 확대재정정책의 지속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채무부담 증대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함.

- 중국은 1998년 이래 6,6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재정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o 국채 잔고의 GDP내 비중은 1998년 10%에서 2002년 18.3%로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9%에서 2002년 3%로 높아짐.

□ 따라서 춘계보고는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확대재정정책의 조정을 건의함.

- 첫째, 고성장 속에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채자금 사용방향을 조정하는 동시에 확대 재정정책의 강도를 다소 완화해야 함.

- 둘째, 지금까지 국채자금은 주로 특정 건설항목에 사용되어 왔으나 향후로는 일상적인 용도로 전환하고, 국채시장 규모 확대 및 정비를 통해 금융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o 동시에 국채발행 총액 통제를 연말 잔액기준으로 전환하고, 프로젝트의 수요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국채사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셋째, 재정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투자증가를 통한 내수확대 단계에서 벗어나 국채자금을 이용한 사회보장체계 정비, “三農(농민, 농촌, 농업)” 문제 해결, 경제구조조정 가속화, 과학기술과 교육부문 투자 등으로 확대해야 함.

□ 또한, 춘계보고는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와 소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중국경제의 내생적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소비수요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함.

- 중국정부가 1998년이래 실시해 온 확대재정정책은 내수확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중국경제의 대외의존적인 성장패턴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을 심화시킴.

- 중국의 투자율은 “八·五”기간중(1991-1995년) 30%, 1997년 33.5%에서 작년 42%로 상승하고, 금년에는 45%에 달할 전망이다.
- 일부 지역과 업종의 과잉투자는 투자구조의 불합리,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중국의 최종 소비율은 세계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감소, 실업 증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1990년대 세계 평균소비율은 80% 수준이며, 1990-2001년 중국의 평균소비율은 60% 정도에 불과함.
-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주요인은 낮은 소득수준, 소득격차 확대, 사회보장체제 미비, 서비스부문의 소비 부진 등에 있음.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감독 강화, 재정이전지출 등을 통한 분배체계 개선이 필요함.
- 동시에 직업교육 강화, 저소득층의 소득 제고, 농촌 기초시설 확대를 통한 농민 소득수준 제고, 사회보장체계 정비, 공무원 임금 인상, 현실적인 최저임금제 시행 등이 필요함.(***)